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파문 번지는 일본 출판계

자의적인 역사해석으로 국수주의 부추겨

백원근 |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요즘 일본의 후소샤가 발행한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교과서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역사해석으로 국민들에게 국수주의와 과도된 애국심을 부추긴다. 일본 내에서도 이 교과서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국내 출판사가 이 책을 번역하겠다고 나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왜곡 교과서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일일 것이다.

신화적 인물을 초대 천황으로 삼는 선택받은 신의 나라, 아시아 침략·수탈전쟁을 서구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대동아전쟁)으로 미화, 한국의 식민지화는 일본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 서민·여성·소수민족이 부재한 지배자의 역사, 해외파병 주장과 핵폐기 반대 등 군사대국화 노선을 담은 문제의 교과서. 더욱이, 문부과학성에 당초 제출된 원본에서 한 반도를 가리켜 “대륙에서 들이던 흥기”라고 표현한 우습고 한심한 교과서. 이것이 요즘 화제가 된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다.

일본 시중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려

왜곡된 일본 역사교과서로 인해 지난 1998년 한·일 양국 정상에 의해 천명된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물거품이 됐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만드는 모임’)이 집필하고 후소샤(扶桑社, www.fusosha.co.jp)가 전례 없이 정식 교과서보다 먼저 발행한 《새로운 역사교과서(시판본)》는 지난 6월 4일부터 일본 시중서점에 진열되기 시작해 50만부 이상 판매됨으로써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다가 하면,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이해 당사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와 함께 정치·경제·도덕·인권 등을 다룬 동저자 동발행사의 《새로운 공민교과서(시판본)》(15만부 판매)도 물의를 일으키고 있

다. 자위대와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며 헌법 개정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봉사만을 주입하고, 부부별성(別姓)과 남녀평등을 부정하는 등 여성 멸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요구한 위안부 기술을 누락시킨 것은 이런 뿌리깊은 남성 우월주의와 근린국 멸시 풍토, 식민지와 침략전쟁의 정당화 등 일련의 비이성적 사관이 융합된 “화장실의 역사를 쓸 수 없다”(필자의 한 사람인坂本多加雄의 주장)는 망발과 연결된 것이다.

원래 이 역사교과서는 자유주의사관연구회 등이 쓴 후소샤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 시리즈(전4권, 1996~97년 발행)에 기원을 두고 있다. 자유주의 사관은 전후의 ‘자학적’ 역사교육을 전면 부정한다. 이어서 ‘만드는 모임’ 회장 니시오 간지(西尾幹二)가 쓴 《국민의 역사》(1999)는 대형 베스트셀러로 입지를 굳힌 바 있으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미래 세대가 자긍심을 가질 만한 교과서를 만들자는 ‘만드는 모임’의 치밀한 연출작이 이번 왜곡교과서로 무대에 등장한 것이다.

지난 5월 8일 우리 정부가 수정을 요구한 35개항에 대해서는, 7월 9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공식 문서를 통해 일체 수정 불가방침이 통지됐다. 오로지 자국 역사 미화와 황국사관, 근린국 비하로 일관한 역사교과서가 학술적으로나 정부 검토 의견상 아무런 오류도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은 모든 교과서를 국정제도에서 검정제도로 바꿨다. 이 책을 비

롯한 7종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문부과학성(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의 검정을 마친 상태로 국립·사립학교는 교장의 책임 아래, 공립학교 등은 채택지구별 교육위원회의 일괄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일선 중학교에서 사용된다. 이번 교과서는 채택시부터 교사와 학교의 의견이나 판단이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지역별로 이를 둘러싼 교육위원회와의 갈등도 적지 않으며, 시판본 형식을 빌린 불공정 판매·선전행위에 대한(‘만드는 모임’은 이를 일부의 몰지각한 비판으로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저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위한 조치라고 우기지만) 교과서업계의 불만도 크다. 문부과학성은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나, 방임을 통해 동조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달에는 전국적인 채택 현황이 최종 집계될 예정이다.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 부추겨

역사 왜곡 교과서로 일약 한국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된 후소샤는 극우언론 《산케이신문》의 자회사이자, 1987년 설립한 이래 현재 10종의 대중잡지와 지난해 165종의 도서를 발행한 직원 177명의 대형출판사다. 후소샤는 《국민의 역사》와 《국민의 도덕》 등 《새로운 역사교과서》나 《새로운 공민교과서》의 성인판이라 할 책들로 이미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3일 역사교과서가 정부 검정을 막상 통과하자 후소샤 직원들은 당황했다는 후문이다(시사주간지 《아에라》 4월 23일자). 당초 ‘검정에 불합격한 교과서’라는 점을 내세운 마케팅 전략으로 대량판매를 시도하려 했기 때문이다. 최근 후소샤는 자사의 번역본 베스트셀러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의 패러디물로 타사에서 번역출판한 《버터는 어디로 녹았을까》를 판매금지 가져본 신청하는 등 출판계의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후소샤 역시

타사의 유사서 출판 실적이 있는데다, 패러디가 설 자리가 없이는 출판의 자유도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역사 해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수주의와 오도된 애국심을 부추기는 데 있다. 장기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자신감을 상실한 일본인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내용이나 방식을 보면 교과서라고는 보기 어려울 만큼 지극히 조악하고 감정적이어서, 개인이 쓴 역사 에세이보다도 못하다. 또한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임을 강조한다. '자학적 사관'에 대한 반발이 극단으로 치달아 자기분열에 가까운 과대망상과 자폐증으로 전도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지성을 상징하는 출판사인 이와나미(岩波書店) 발행의 유명월간지 《세카이(世界)》 6월호 특집은 편집자주에서 "어디를 보아도 놀랍고, 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기술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가 하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는 "나로서는 이런 교과서로 배우거나 가르칠 일이 없어 고마운 일이지만, 나에게 중학생 손자가 있거나 교사 아들이 있다면 이 교과서를 권할 수 없다"고 단정지을 정도다. 시사지 《주간 금요일》(5월 11일자) 역시 "유치한 거짓말과 여성 멸시가 곳곳에 실려 있다"고 혹평한다. 한마디로 왜곡 교과서는 "국가투쟁사관에 지나지 않는다"(코베대학 五百旗頭眞 교수)는 표현이 제격이다.

교과서 왜곡은 집권세력의 조직적 폭거

일본은 보수우경화, 국수주의화, 군사대국화 전략을 펼치면서도 국제사회의 리더를 자임하고 있다. 왜곡교과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7월 말의 참의원선거, 가을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선거 등 국내정치용 세몰이를 위해서는 이런 흐름이 더욱 거세질 것이고,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이 거셀수록 '내정간섭'임을 선동해 오히려 집권세력의 표발같이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일부 우익의 발호나 편향이 아니라 일본 집권세력 전반의 의사표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역사 왜곡 교과서 반대에 앞장서온 시민단체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 21’의 타와라 요시후미(俵義文) 사무국장(출판노련 교과서대책부 부회장)이 폭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일본이 국제여론 등에 떠밀려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한 역사교과서 제자리찾기 작업은 곧바로 우익집단의 대반격에 부딪혔다. 중근위안부나 남경대학살 등 가해적 기술을 ‘자학사관·반일사관’이라 비방하며 1996년에 등장한 것이 ‘만드는 모임’이다. 현재 1만명이 넘는 회원을 전국 48개 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공식 회비

만도 연간 45억원 이상이다. 이 모임은 중앙과 지방의 자민당 계열 의원들이 지역별로 ‘교과서의 원연맹’을 구축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기업 경영자들 역시 후원자로 나서 물심양면의 후견인 노릇을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및 헌법 개악 등도 이와 연동돼 있다. ‘만드는 모임’과 개헌 추진조직인 ‘일본회의’ 등 역사수정주의 우파 세력이 총결집해 지난해 4월 결성한 ‘교과서개선연락협의회’는 정부·정당에 대한 정치공작, 소속단체 지부를 통한 교과서 채택활동이 주목적이다. 때문에 교과서 채택활동에서는 ‘만드는 모임’이 앞에 나서지 않고 ‘협의회’가 그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일본 집권당의 움직임 역시 조직적이다. 1993년 설치된 자민당 내 역사검토위원회는 1995년 8월 15일 발행한 《대동아전쟁 총괄》이라는 책을 통해 침략·가해·범죄행위를 전면 부정하는 동시에 태평양전쟁이 아시아 해방전쟁이었다는 등의 인식을 국민운동 차원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997년 2월 당내에 설립된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은 말할 것도 없이 ‘만드는 모임’의 정치적 기반이다. 현재 자민당 의원의 과반수는 ‘만드는 모임’의 후원자들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의 집권세력인 정·관·재계를 아우른, 힘없는 일본 국민과 근린국 국민들에 대한 조직적 폭거다. 그것은 또한 침략전쟁의 이미지를 불식시켜, 전쟁 포기를 천명한 ‘평화헌법’ 9조를 폐기처분하기 위한 사전 정치작업이기도



일본 내에서도 왜곡 교과서를 둘러싼 국수주의적 우익세력과 양심적 지식인들 사이의 찬반이 비등하고 있다. 사진은 시판본 《새로운 역사교과서》와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단행본과 잡지.

하다. ‘주변사태법’으로 근린국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고, ‘국가국가법’으로 침략전쟁의 상징들이 부활했으며, 군비 증강으로 군사대국화가 가능해진 마당에 더이상 거칠 것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지지율이 80%대에 이르는 유례없는 이상기류 속에서 1급 전범들을 참배하기 위한 야스쿠니 신사행 ‘우향앞으로’가 우리의 광복절이자 저들의 패전일인 8월 15일 결행될 것이다.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와 연대해야

덩치만 커진 철없는 미숙아를 이웃에 둔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우리 정부와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일본의 왜곡교과서 수정 요구를 하고 일본내 양심세력들이 출판과 토론회, 왜곡 교과서 불채택운동 등을 하는 사이, 국내 7개 출판사가 미성숙아의 일기(역사교과서)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읽어(번역출판)주겠다고 나서려 했다가 찰 노릇이다. 최소한 그것이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일본 우익의 역사관 비판서를 내든가, 아니면 일본에서 출판 러시를 이루고 있는 《새로운 역사교과서》 비판서들을 소개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또한 피식민지 당사국의 당연한 권리인 왜곡 시정 요구조차 내정간섭으로 몰아부치는 저들에게, 정부나 민간 차원의 활동 이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위험한 교과서, 어린이에게 줄 수 있습니까? 전국네트워크’ (5월 29일 결성) 등을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연대해 자국민에 의한 역사의 복원을 돕는 일일 것이다.●